

# 尹 “정호영 부정 팩트 확실히 있어야”... “조민 사례와 달라”

### “尹, 의혹 보도 빠짐없이 지켜봐...기자회견 지켜볼 것” “조민씨 학력 위변조 준하는 범법행위 있었는지 중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들의 ‘아빠 찬스’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40년 지기로 자녀들의 경북대 의대 부정 편입 의혹과 아들의 군면제 과정 의혹 등 각종 의혹에 휩싸여 ‘의혹 백화점’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제2의 조국 사태’로 규정하고 있어 인사정문화 통과가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 당선인이

정 후보자 의혹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정 후보자 관련해 언론에서 여러 궁금증들이 제기된 것은 지켜보고 있다. 오늘 오후 후보자가 자청해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해서 지켜보고 있다”며 “과거 자녀 관련해 위·변조 같은 명확한 부정행위, 범죄행위 있었는지, 본인이 해명해서 국민 납득시킬 수 있는지 지켜보고, 국민 말씀 경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 관련 의혹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인사검증 부실 아니냐고 하는 것은, 공개할 수는 없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해명했다.

부정의 팩트가 발견될 경우 향후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질문에는 “어떤 결과를 전제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다만 후보자 본인이 소명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당선인과 인수위는 정치권과 국민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선인께서도 오늘 기자회견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밝혔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정 후보자 의혹 보도) 빠짐없이 지켜보고 있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 대변인은 정 후보자 관련 의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사례와 다르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배 대변인은 “이들때면 조민씨와 많이 비교되는데 (조민씨는) 명확한 학력 위·변조가 확인된 상황인데, 정 후보자가 갖는 많은 의혹과 의문이, 과연 그에 준하는 범법행위가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며 “지금까



지 해명한 바로는 전혀 없기 때문에 사례가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 한 관계자는 정 후보자 의혹이 범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범법 및 위법이 확인되는 부정행위와 의혹의 단계는 엄연히 다른 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최이슬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구청장 후보 오는 22일 결정

서대석 오늘 ‘운명’ 결정...‘땀땀’ 서구청장 선출 절차 재개하나



6·1지방선거에 나설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청장과 남구청장 후보가 이번주 결정된다. 최근 지역에 들고 있는 광주지역 기초단체장 전략공천은 없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17일 광주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광주 동구청장과 남구청장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21~21일 이틀간 실시된다.

동구청장 경선 후보로 강진기 김성환 임택진선기, 남구청장은 김병내 김용집 박기수 예비후보가 확정됐다. 18일 남구, 19일 동구 후보자 TV토론회가 민주당 광주시당 주최, CMB광주방송 주관으로 열린다. 경선은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안심번호를 대상으로 표본수를 추출해 무작위 ARS 투표를 통한 국민참여경선(권리당원 50%, 일반 시민 50%)으로 진행된다.

음주운전 전력으로 유력후보가 낙마한 광주 광산구청 후보 면접이 이날 오후 실시된다. 면접, 컷오프,재심 등의 절차를 감안할 때 경선은 다음주 중반 이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구청장 후보선출 절차는 서대석 서구청장의 재심 판정이 최종 나오지 않아 멈춰진 상태다. 18일 서 청장에 대한 재심판정이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되면 후보자 추천 절차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꾸준히 제기됐던 광주지역 기초단체장 여성전략공천 등 전략공천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전략공천 문제가 지난주 지역정가에서 들었으나 여러 논의 끝에 없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광주 기초단체장 전략공천은 없다”고 뜻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지난 4일 “아무런 의미는 좋아도 (선거) 인접해서 더군다나 단체장은 시의원들과 다르다. 광주지역 기초단체장 여성 전략공천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고 했지만 이날은 “전략공천이 없다”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다. 김재환기자

## 소병철 의원, 코로나 사태 감안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법’ 2년 연장 개정안 발의

오는 8월 4일 종료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법’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기간을 2024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보증인의 부동산 소재지 거주기간 조건과 과도한 보수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과거 해방과 6.25 사변 등으로 부동산에 관한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상 권리가 다수 일치하지 않자, 이를 간소한 절차로 바로 잡자 1978년 한시적으로 제정됐다. 이후 현행 4차까지 세 차례 더 시행되었으나 지방과 농어촌 지역에서는 홍보 부족 등으로 여전히 소유자와 등기자가 다른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인 4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코로나 사태를 예상하지 못한 2020년 2월 제정되고 등기조건으로 보증인과의 직접 대면을 통한 확인을 요구하면서, 순천의 일부 농어촌 지역과 같이 고령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코로나 감염위험으로 법규정 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 인구가동과 농촌지역 고령

화로 장기간 거주하는 주민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25년 이상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현행 보증인 자격 요건과, 지역별 토지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450만원 이하로 정한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보증인 보수 수준도 농어촌 주민들과 보증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올해 8월 4일로 예정된 현행법의 종료시점을 2024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보증인의 부동산 소재지 거주기간을 현행 ‘25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조정했다. 자격보증인의 보수도 개별토지 공시지가의 10% 수준으로 정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소병철 의원은 “불과 4개월 남은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이대로 끝나버리면 지방과 농어촌 지역의 국민들은 코로나 사태로 법을 제대로 이용하지도 못하고 향후 민사소송과 같이 회복할 수 있게 된다”면서 “본인들의 책임이 아닌 국가적인 감염병 재난사태로 법을 이용하지 못한 것인만큼, 신속한 개정안의 통과로 우리 국민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권리행사의 편의를 도모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